

法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노조측 일부 승소 판결
“사측 4223억 지급하라”

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3·14면〉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기아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할 연차·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 시간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액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로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에 경영상 중대한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기아차 ‘빨간불’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이날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임금명목	임금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정기상여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 ×
성과급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	○ ×
특정시점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휴가비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에 지급)	○ ×

법원이 인정한 기아차 노조 측 요구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정기상여금 ○ 중식비 ○ 일비 ×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5·18 헬기사격 수사 착수 ▶ 6면

Books-‘경계에 흐르다’ ▶ 14·15면

新팔도유람-전주 문화재 夜行 ▶ 18면

그 근거로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 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정·경영 상태와 매출 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및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

아차가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매년 근로자 모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점을 보면 재판부가 인용한 원리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호 신뢰를 기초로 노사 합의를 이뤄온 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관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이고, 이자 4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이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이다. /연합뉴스

“헌법에 5·18 담고 지방분권 강화하라”

광주서 헌법개정대토론회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과 관련,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5·18 정신과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그동안 술한 왜곡과 편향 속에서 저평가된 5·18 정신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 3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영·송기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간사,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명시는 광주의 자랑스런 역사와 정신이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로 계승·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요구했다. 이

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던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역 토론회자들은 지방분권 강화도 강조했다.

토론회자로 나온 광주전남연구원 김재철 선임연구위원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개헌은 헌법에 지방자치에 필요한 분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인선숙 수석부회장은 “지방의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민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방분권이 강화된다면 자치입법권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개헌 내용과 과정을 알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국을 돌며 개최하고 있고, 지난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이날 광주에서 2번째로 열렸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수능 절대평가 1년 미뤄 현 중2부터 적용

교육부 내년 8월까지 방안 마련

절대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1학년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이 1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수능 체제로 시험을 치르고, 새로운 수능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관련 기사 7면〉

교육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시안 2가지 중 하나를 개편안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개편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공론화와 9월 출범할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입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과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개편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수능 개편과 대입 전형 등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따라 현재 중3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신동엽, 라미란은 NK뷰킷으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NK뷰킷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활성도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